

# 종속적(從屬的) 지역연구와 내관적(內觀的) 사회문화론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나의 질문은 '포스트모더니티'란 이슈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입장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인가에서 시작한다.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시한 외관적(外觀的, etic) 관점만을 방법적 시각으로 동원할 경우, 그것은 궁극적으로 외부에 대한 지역 연구일 수밖에 없다. 종래 우리가 '지역연구'라고 불렀던 '지역'은 냉전시대에 구축되었던 개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섹국적 성격에 기반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관리'라는 용어에 담긴 외관적 시각은 궁극적으로 착취를 지향하며, 지역은 외부의 이익창출을 위한 자원이라는 자격을 부여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 학계의 지역 연구에서는 미국과 서구중심적 시각에 안착하여 'XX지역'을 구성하는 '누구'의 속성에 대해, '나'의 시각을 갖추지 않은 채 서구에서 생산된 지식을 우선하는 관점중속의 현상(관점식민주의)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 지역연구는 '누구를 위한 지역연구인가?'라는 질문, 즉 관점의 문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대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연구를 하려면, 정치경제 중심의 외관적 관점으로부터 사회문화 중심의 내관적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지역은 내관과 외관이 각축하는 상상공동체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 위에 설정된 지리적 공간 내의 주민 정체성과 문화주권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나는 지역이라고 부른다. 또한 관리라는 용어는 공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공생적 개방성을 전제로 한 지역연구에서는 방법론상 선결조건으로 상대방의 문화주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하며, 조사와 연구의 권위성에 대한 자성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뒤르카임(Durkheim)이 제시하였던 '사실(事實)'로 돌아가, 그 '누구'의 내관이 지역연구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분석적인 지식이 아닌, 총체적인 삶의 지혜를 배우는 지역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관점식민주의, 내관, 외관, 공생, 지역=학교

## I. 서론: 뒤르카임(Durkheim)의 '사실'

'포스트-모던'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이어서 각종의 '포스트-'류들이 난무했던 상황이 이제 좀 진정되어 가는 듯하다. 그 과정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나 도,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포스트-'류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누구의 입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들이었던가? 그것이 문학의 영역이든, 예술의 영역이든, 아

니면 융합의 영역이든, 그 모든 범주를 통괄한다고 생각되었던 ‘포스트-’류들은 사실상 세계 사상계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하는 유럽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던 것임에 분명하고, 후발 주자들은 알게 모르게 학습과정으로서의 앵무새 역할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학습과정이 있었기에 나 같은 백면서생도 이제서야 한 마디를 거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질문은 다시, ‘포스트모더니티’란 이슈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입장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인가로 돌아간다. 그 ‘누구’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있는 천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것들도 허구의 사상누각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나는 오늘 의 글을 쓰게 되었다. 그 ‘누구’에 대한 정의와 설명조차도 그 ‘누구’ 스스로에 의해서 생각되고 정의될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논의되는 ‘포스트-’류들이 보편적인 그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다.

그 ‘누구’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사실”에 대한 진정한 관찰과 질문과 직접 체험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누구’를 얘기한다는 현상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뒤르카임의 “사실”에 대한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대서양을 간극한 런던-파리-뉴욕의 삼각구도 사이에서 출발한 ‘포스트-’류들이 던져주는 논리전개에 매료된 소위 제3세계의 식자들이 그 ‘누구’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포스트-’류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자아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체성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과연 그 많은 종이를 소모하면서 제시되었던 ‘포스트-’류들이 이슬람 세계의 세계관과 무슬림의 삶을 향하여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던져준 바가 있었던가? ‘포스트-’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스리마일 아일랜드’와 ‘체르노빌’ 원폭사건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교감이 오고 갔었던가? 침묵하지 않았던가? 런던-파리-뉴욕의 복사판으로 등장하였던 동경에서 터진 ‘후쿠시마’ 원발사고에 대해서 ‘포스트-’류는 무슨 언설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샌프란시스코의 밥상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전하는 이 시점에 60년 전 비키니 섬 사람들의 피폭 고통과 ‘포스트 피폭’을 거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나도 그리고 너도 또 다른 ‘아담’이다.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던 70년 전, ‘아담,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내 귀에 쟁쟁거린다. 만약에 누군가가 스리마일 아일랜드와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의 고통을 ‘포스트-’류의 관점으로 거론해주는 기적이 있다면, 나는 미크로네시아의 비키니 섬에도 애당게 ‘아담’을 부르는 ‘아담’의 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아담’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울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아담’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류학과 사회과학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 II. ‘누구’를 위한 지역연구인가?

널뛰는 주식시장과 유로권의 불안한 행로를 바라보는 사람은 동일한 시선으로 말비나스(포크랜드)와 카슈미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누구’는 카슈미르에도 있고, 말비나스에도 있다. 오바마와 푸틴 그리고 후진타오에 쏠린 눈은 그린랜드의 북쪽에서 녹아내리는 빙하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에스키모의 사냥꾼과, 말라버린 땅바닥을 바가지로 긁어서 물을 구하려는 사헬의 모정에게도 살포시나마 눈길을 주는 것이 그 ‘누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일 게다. 정글 속에서 독립을 다짐하는 오피엠(오르가니자시 파푸아 메르테카) 단원들의 맹세 소리를 찾으러 다니는 인도네시아 정보부대에 돈을 대주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파푸아 금광의 원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반성을 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를 위한다는 ‘인권’은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그 ‘누구’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사실’은 ‘포스트모더니티’의 전신인 ‘모더니티’와 ‘프리모더니티’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 ‘포스트-’ 관점의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전 단계의 속성들과 혼재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속성이다. ‘포스트-’가 원제작지를 출발하여 제3세계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하나의 추가적인 ‘사실’이라고 첨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개입되기 마련인 타자화라는 과정도 ‘사실’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중첩적일 수밖에 없다. 런던에서 논의하는 ‘포스트-’와 요하네스버그에서 언급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다를 수밖에 없고, 워싱턴디시에서 출발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푸에르토리코에서 회자되는 그것과 다

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주체와 각각의 주체를 구성하는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더니티'의 관점을 구성하던 과정에 동원되었던 선교사들과 군인들을 포함한 관료들의 세밀한 보고서들이 어떻게 중심부의 관점과 정책을 구성하는 영양소의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과정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1984년'의 대형(大兄)은 전지전능한 신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대형들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와 사상들이 구성되는 과정의 후면부에 대한 천착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대형의 자세와 언설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 대형은 수많은 첩자들을 파견하고, 정보들을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들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과정들을 모두 후면부에 숨겨둔 채로 말끔하게 정리된 '파이널 버전'만 보여주는 속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카리스마(막스 웨버가 사용한 것)를 만드는 수법이기도 하다. 대형의 '포스트-'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체로 진화하는 몸부림을 진행시키고 있다. CIA와 미 국방성이 만든 인간지역체계(Human Terrain System, 실질적인 업무수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라는데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노출 패션을 대형의 카리스마에 적용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에 군복을 착용하고 총갈 대신에 필드노트로 무장한 인류학자들이 산악의 부족사회를 상대로 현지연구를 함으로써, 전투지역의 상황 파악을 시도한다. 백악관은 노출이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의 대세라는 점을 읽고 있는 것이다.

진열장에 널려 있는 시계와 모바일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 중에는 내부 태엽과 나사들의 움직임이 다 보이도록 제작된 것들이 있다. 그 내용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즉 속을 보여줌으로서 관심을 사겠다는 패션이다. 일종의 '씨-스루(see through)' 패션, 즉 '속 보이는' 패션인 셈이다. 그것은 구상과 추상의 시각적 전도효과를 노린다. 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추상화의 인식과정을 구상화에 의한 역행방식으로 공략하는 전략이다. 바야흐로 그 전략이 물건으로부터 사람의 몸으로 이전되었다. 물건에서 인간의 몸으로 대상을 이전시킨 것이다. 여러 겹의 천 조각이 한 겹 두 겹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추상화의 인식을 경험하도록 요구하였던 대상이 바야흐로 노출로 이어진다. 노출이란 현상도 진화한다.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을 매력 포인트로 내세우는 코카시안 여성들의

패션이 양쪽 다 ‘절벽’인 동아시아에 상륙하면서, 패션의 마법은 볼륨에서 노출로 전환하였다. 동아시아 여성의 허벅지가 패션의 대상이 되었다.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에 자신이 없으면, 다른 부분을 노출시켜서라도 패션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노출 패션의 상술이다. 허벅지 노출에 놀라는 코카시안 여성들은 자신들의 허벅지를 노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려졌던 곳을 드러내는 노출 패션에는 약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카시안 여성이 허벅지를 드러낼 때, 비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매력이 아닌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노출의 비밀은 매혹과 혐오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일이다.

해체는 새로운 대상이 드러나는 경험을 피할 길이 없다. 천 조각으로 꼭꼭 몸을 둘러쌌던 유럽인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만났던 아마존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체’를 만났던 기억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존재한다. ‘야만’이었던 ‘나체’가 ‘포스트’의 끝자락에서 ‘문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프리’와 ‘포스트’로 구분된 내재적 불평등성에 호도되었던 인간의 역사를 재발견할 수 있다. 한두 겹의 얇다란 천 조각을 걸 어넘으로써 얻는 노출은 이미 르노아르와 피카소의 누드에서 발견된 바 있었다. 노출의 전격성과 누드의 영원성 사이에 존재하는 상징전환의 착각에 대한 인간 경험은 근대가 만들어낸 패션일 뿐이다.

따라서 ‘프리’와 ‘포스트’의 구분은 인간을 위한 거울을 파괴한 사상적 전환이었다. 구분이 차별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던 푸코(Foucault)의 의도에 진정으로 동감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어 자행되었던 구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공정한 대화와 공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준하는 실천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타자화되었던 ‘누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의 출발일 것이다. 측정이라는 형식의 잣대에 주눅들었던 경험에 대한 속죄의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함께하는 반성의 출발은 불가능하다. ‘아이큐’란 잣대는, 미신이란 잣대는, 색깔이란 잣대는, 속도라는 잣대는, 문자라는 잣대는 한낱 구분을 위한 구실이자 속임수일 뿐이었다는 고백이 필요하다.

해체를 해체하는 경험, 즉 ‘포스트모더니티’의 극을 향하는 시각적 경험이 진행된다고 야단들이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던 ‘모더니티’가 해체되면서, 굉장

히 새로운 모습이 전개될 것처럼 수사들을 동원하지만, 해체의 대상에서 멀리 존재하였던 ‘프리’도 사실상 그 속에 함께 공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발견이 필요하다. 해체는 종결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과정일 뿐이다. 해체는 또 다른 해체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석가모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의 엄연성 위에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티’가 몸살이 나도록 되뇌었던 해체에 그토록 얽매일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도 해체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해체의 해체과정에 대상으로서 개입되어 있는 ‘누구’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라는 존재는 ‘프리’에서부터 ‘포스트’에 이르기까지 줄곧 거기에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망각하였다는 점에 대한 깨우침, 즉 이 세상의 어디에나 어떠한 상황하에서나 존재하는 나와 너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깨우침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각성의 발견이다.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굿판은 고려사와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현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조선총독부의 서슬 시퍼렇던 규제와 감시의 눈을 피해서 진행되었던 굿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프리모더니티’와 ‘모더니티’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가 모두 함께 진행되고 있는 ‘누구’의 삶에 대하여 진정성을 갖고 심층적인 관찰을 하지 않은 상태의 아카데미즘은 타자화의 사상저주(思想咀呪)를 피할 길이 없게 된다.

### III. 냉전시대의 쇄국성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망의 조직을 운영한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CIA라는 조직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의 정보망들이 활동하며 첩보망의 활동을 거미줄처럼 엮어내어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지역연구라는 항목은 전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추구되어온 경향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대학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연구’, ‘극

동아시아 연구’, ‘미국 문명’ 등이 개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지역연구를 위한 각종 위원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등)들이 결성되었으며, 각 위원회에서 나온 소위원회들과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범국가적인 민족지리국(Ethnogeographic Board)을 구성하여 전쟁 중에 활동하였다. 이 조직은 전후 Exploratory Committee on World Area Research로 탈바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연구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Hall, 1947: iii-1).

유사한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도 전개되었다. 동경의 문부성은 국립 조직으로 민족연구소를 설립하여 민족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학자들을 거국적으로 동원하여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도서 그리고 만주지역의 전장(戰場)으로 파견하였다. 그 조직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비엔나대학 출신의 민족학자(인류학자) 오카 마사오(岡 正雄)였다. 일본 육군은 점령지의 민정부(民政府) 구성을 위하여 학자들을 사정관(司政官)으로 고용하였으며, 일본 해군은 뉴기니아자원조사대를 편성하여, 대규모의 연구인력과 지원부대를 동원하였다. 동경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부터 파견되어 그 과정에 참여하였던 ‘해군축탁’ 이즈미 세이이치(泉 靖一) 당시 학생주사(學生主事, 후일 동경대학 문화인류학 교수)는 해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족공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예를 들면, 추장의 제거와 선무공작)을 제시하였다. 태평양전쟁 중 고든 보울즈(Gordon Bowles, 후일 시라큐스대학 인류학 교수)는 중경과 곤명에서 전략정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후 CIA로 개명)과 비호대(飛虎隊, Flying Tigers)를 위한 공작에 참여하였고, 전후 동경의 맥아더사령부(GHQ)에서 존 베넷(John Bennett, 후일 워싱턴대학 인류학 교수)은 효율적 일본점령을 위한 사회조사를 담당하였다. 1947년 서울의 미 군정은 커넬리우스 오스굿(Cornelius Osgood, 예일대학 인류학 교수)의 강화도 선두포 연구를 지원하였고, 그의 연구 결과(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1951)는 한국전쟁 동안 전장에 참여하는 미군들의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역연구는 바야흐로 점령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전쟁 동안에 베트남의 지하조직들이 활동하는 메콩지역에 대한 첩보의 부족으로 갈증을 느낀 CIA는 위장 재단을 통하여 인류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젊은 미국 인류학자가 현지작업에 투입되었

다. 그 작업의 결과는 메콩지역의 공산지하조직을 초토화시키는 피닉스 작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들의 연구가 CIA의 위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연구자는 자살하였고, 다른 한 연구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장기간 사라졌던 제럴드 히키(Gerald Hickey, *Village in Vietnam*의 저자)는 사반세기가 넘어서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말단조직에서 ‘지역연구’라는 명목으로 활동하였던 인류학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고정된 개념으로서의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역은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경계가 흐물거리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충격으로 다가왔던 무경계는 이제 더 이상 충격을 수반하지 않는다. 진화가 부여한 적응이란 메커니즘은 지역과 지역의 경계에도 작동한 것이다. 냉전시대의 갇힌 눈으로 보았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갇힌 대상이 아니다. 베를린 장벽이 사람의 손으로 헐어졌듯이, 지역은 사람에 의해서 모두 헐리고 있다. 물론 경계가 분명한 ‘지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경계가 분명하였던 ‘지역’이 물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통신에 의해서 돌파된 것은 다반사가 되었다. 그래서 종래 우리가 ‘지역연구’라고 불렀던 ‘지역’은 냉전시대에 단단하게 구축되었던 개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고정되고 갇힌 사상이란 쇄국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실들에 기초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릇된 사상으로 무장된 세대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냉전적 쇄국성의 교육에 기초한 민족주의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가장 주변에 있는 지역, 즉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임진왜란의 발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팽창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대동아전쟁 당시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는가? 동일한 시기에 미국은 중국에서 어떠한 첩보활동을 하였는가?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개입된 임시정부의 활동만을 부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사



실에 입각하지 않은 정보들을 배경으로 조성된 민족주의는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얼마나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직도 진행되는 쇄국적 교육 체계 속에서 지역연구가 과연 제대로 된 방향 감각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명분으로라도(그것이 민족주의일지언정) 전체와 부분을 혼동시키는 교육은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1985년 서울대학교에 지역종합연구소(현재 국제대학원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는 잠깐 동안 그 조직의 연구부장이라는 직함을 맡아서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다. 초창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연구를 정의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지역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내의 인력들을 규합하는 단계에서 드러났던 사실은 지역연구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지극히 일부의 학문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도 당시의 성취도가 극히 저조하였다. 소위 메이저 분야에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극히 그 정도가 저조하였다. 그 이후 지역연구의 판도는 기존 학문구도의 '정치판'과 먹이사슬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문어발 확장과도 같은 재벌의 행태처럼, 지역연구를 대하는 학계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문어발 확장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연구 자체와는 별개의 논리로 기존의 정치경제 중심의 지역연구라는 판이 형성되는 과정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계의 정치경제적인 연구경향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대형(大兄) 중심, 그것도 미국과 서구 중심의 정치경제적 연구경향에서 지역연구의 방향타가 조정되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과 서구 중심의 정치경제적 연구가 지역연구의 방향타를 잘못 잡은 원천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문제는 미국과 서구 중심의 정치경제적 연구의 한국적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연구의 경향은 미국과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연구는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로 넘쳐나고, '××지역정치'와 '××지역경제'의 전공자라는 학자들도 등장하였다. 정치학적 지식이나 경제학적 지식을 어느 특정지역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치학 및 경제학은 전혀 별개라는 조언에 귀

를 기울이게 된다. 문제는 '××지역'을 구성하는 '누구'의 속성인 것이다. 그 '누구'가 '××지역'에 대하여 부차적인 상황이 마련된 것이 목하 진행 중인 지역연구라는 것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잘 봐주면, 주객이 전도된 지역연구라고나 할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구르의 상황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북경의 얘기를 전해주는 정도이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이나 이곳의 연구자들이 직접 생산한 지식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해당 지역의 지식에 근거하게 된다.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따끈따끈한' 지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우선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버릇이 고착화되다 보니, 미국의 잘못된 시각이 전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바라보지도 않는 습관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를 구성하는 속성에 대한 지식의 생산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부차적이 되고, 그 '누구'에 대한 미국의 관심표명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버린 것이 문제이다. 이슬람 사회에서 전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진솔한 표현일 것이다. 세계의 어느 구석구석을 바라보더라도, 그 '누구'에 대한 '나'의 시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미국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그릇된 것이 아닐 게다. '누구'에 대한 '나'의 시각을 갖춘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관점종속의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관점식민주의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시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미국연구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라는 자리 대신 '서구'라고 이름붙여도 좋고, 소위 대형들 중의 하나를 대신해도 논지의 대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대학교에 지역종합연구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지금 거의 그대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모든 지역연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미리부터 차곡차곡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극소수의 연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다. ‘지역’과 미국 사이에 걸린 밧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노력이 없으면, 지역연구는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기를 도전받고 있다. 냉전시대의 지역이란 타깃이 고정되어 있었다. 세계화 시대의 지역은 타깃이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지역은 다소성(多所性, multi-sitedness), 이동성(移動性, mobility), 유연성(柔軟性, softness)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생각하든지 간에 생태성(生態性, ecology)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생태계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지역연구의 기반은 위의 네 가지, 즉 생태성, 다소성, 이동성, 유연성의 조건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이란 개념의 성격은 최소한도 위의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무경계를 지향하는 조직들은 마약과 인신매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K-POP과 도요자동차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돈벌이 강연여행(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부산의 영도에서 버린 쓰레기는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의 서쪽 해안에 무르팍이 넘도록 쌓이고, 대만 란위섬의 핵폐기장에서 녹아내린 찌꺼기들은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일본과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들은 상파울루의 옷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이란 이름의 일본 투수 다르비쉬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탈삼진 기록을 겨냥하고 있다. 파푸아의 외딴 섬에서 ‘레인’이란 이름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사로잡은 ‘비’는 더 이상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국경이라는 것에 갇힌 것은 없다. 국가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었던 유로의 실험은 사실상 무경계의 본모습을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 수행한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성공적인 모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국적은 더 이상 사람을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 갇히게 하지 않는다.

#### IV. 외관(外觀)에서 내관(內觀)으로

정2품 소나무(正二品松)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시작된 것은 가지(枝)의 일부와 그 가지 끝에 걸린 나뭇잎(葉)들이 말라가는 현상이 감지된 때부터였다. 그 소나무의 중심이 되는 본체의 기둥이나 굵은 나뭇가지에는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무는 나뭇잎에서 시작하여 잔가지와 굵은 가지를 거쳐 점차 중심부로 그 문제가 전염 이동된다. 재선충으로 온 산이 붉게 변하는 현상은 소나무의 잎사귀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 굵은 가지나 동체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식물의 문제는 잎사귀와 가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장의 문제는 심장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에서 연결되어 나간 혈관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손이 저리며 어깨가 결리는 현상을 파악한 의사는 심장의 문제를 간파할 수 있다. 지엽적인 문제가 결국은 중심적인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얘기다.

나무의 몸통과 잎사귀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고, 생김새도 확실하게 다르다. 그러나 가지의 끝에 있는 부분들을 관찰하면, 줄기와 잎사귀 그리고 가지는 확연한 경계가 없다. 몸통에서는 확연한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지엽(枝葉)’에는 확연한 경계가 없다. 지엽이 없이는 몸통이 유지될 수도 없고, 지엽을 관찰하지 않으면 몸통의 속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잎사귀가 여럿 달린 잔가지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러한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나무를 살릴 수도 있다. 몸통만이 중요하였던 냉전 시대에는 몸통의 편익에 따라서 가지들을 잘라버릴 수도 있었다.

탈냉전시대란 냉전시대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지엽을 보게 된 탈냉전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탈냉전+세계화’의 구도는 지엽들 모두가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스 선거가 뉴욕과 런던의 증권시장을 흔들고, 그 흔들림은 여의도까지 요동치게 한다. 원래 지엽적인 지역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지엽이 몸통만을 바라보던 시대가 냉전시대였다. 냉전시대에도 몸통에서는 지엽을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몸통은 지엽의 중대성을 잘 감지하고 있었지만, 지엽에서는 지엽 스스

로의 의미에 대해서 관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냉전시대의 지엽은 몸통에 의해서 규정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탈냉전시대의 특성에 의해, 지엽들끼리 서로를 보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지엽은 지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지엽은 몸통이 지엽을 중요시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몸통이 규정해주던 지엽의 정체성은 더 이상 지엽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스스로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는 표현일 뿐이고, 식민지 근성의 말석에서 발생한 의타심일 뿐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세상이 언제 또 몸통 중심으로 재편될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지엽이 지엽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지엽이 지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박탈될지 알 수가 없다. 지엽들을 관찰하고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몸통 중심의 세상이 도래할 기회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엽들이 상호관찰과 상호이해를 통한 연대를 형성할 때 대형 중심의 냉전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전개되는 세상이다. 단 한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몸통[大兄] 중심의 세상으로 전환되는 일이다. 현재 아바나 근교의 유기농 재배자들은 허쉬 시대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소비에트 시대의 설탕공장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노래한다. 몸통 중심 세상의 노스텔지어를 노래하는 현상이 신식민주의가 아닌가. 지엽이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몸통에 대한 노스텔지어일 수가 없다. 지엽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갖추어지고, 지엽들 간의 거울효과를 생산하는 것이 우선적인 탈식민주의의 행로라고 생각한다. 탈식민주의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던 쿠바를 들여다보고,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들여다봄으로서 발생하는 교육효과를 말한다. 지엽들 간의 거울효과는 몸통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ODA식의 시혜적 관점의 연대는 곤란하다. 그야말로 눈 높이를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질 수 있는 협력관계가 지엽들의 연대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ODA 단원이 카자흐스탄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현지를 잘 모르는 단원이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공생이 가능한 상대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은 ‘베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베폰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관계는 긴장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친구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한다. 내가 잘 된 상황을 뽐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친구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아니다.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먹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의 힘자랑을 과시할 대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진정한 연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뽐내는 값을 치르는 순간일 뿐이다. 지금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나의 여유분으로 우리 함께 살아감에 보탬이 되는 방식의 연대를 강구하자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내가 여유가 생길 때, 또 다른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태를 겨냥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협력방식일 수 있다.

세계적 구도의 지역적 존재는 그것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내용을 교육하는 지역연구가 제대로 된 지역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수준에서,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연대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지역연구는 결코 종속적이고 쇄국적 지역연구를 원하지 않는다. 북조선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이고, 남한에서 호주로 이주한 사람은 ‘이민자’라는 식의 불공정한 관념 속에서는 결코 쇄국성을 벗어날 수 없다. 남한에서 호주와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은 ‘탈남자’가 아닌가? 북조선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의 끊임없는 재생산, 일본에 대한 축소지향적 관심, 중국에 대한 기준 없는 외교정책, 대미의존 일변도의 외교와 국방정책 등이 과연 열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국제정치의 오염 현상이 쇄국적 지역연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역연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1940년대일 뿐, 그러한 현상을 취급해온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는 점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삼국지위지(三國志魏志)』로부터 시작하여 예일대학의 인간관계지역자료(HRAF: Human Relations Area Files, 후일 독립재단으로 발전됨)의 자료집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국주의자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이 ‘지역’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식민주의적인 시각이다. 조선총독부가 의존하였던 관점이 관리(좋은 말로 표현한다면)였다. 조선반도의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관리인가? 그것이 제국일본의 이익을 위한 관리였다는 것은 한 점 의심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출발은 ‘누구를 위한 지역연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근거로 하여, 지역과 지역의 주민이 지역연구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관리라는 용어를 결코 적용할 수가 없다. 그것은 공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공생이 전제되지 않은 지역연구는 식민주의로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생을 기본 전제로 한 지역연구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내관적(內觀的, emic)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지역 주민의 관점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한 경우에만 삶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시한 외관적(外觀的, etic) 관점만을 방법적 시각으로 동원할 경우, 그것은 궁극적으로 외부를 위한 지역연구일 수밖에 없다. ‘관리’는 허울 좋은 단어일 뿐, 외관적 시각은 궁극적으로 착취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 지역은 외부의 이익창출을 위한 자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식민주의라고 이름한다. 우리는 지역연구라는 이름하에 세상의 도처에서 자원착취를 위한 지역연구들을 보아왔다. 이러한 경우, 그 상상공동체의 지역은 ‘히노마루’로 상징되는 일본인의 사상에서 시험될 바 있다. 아시아라는 인식의 극대화된 공동체 시도가 대동아공영권이었던 것은 역사가 증언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대동아라는 상상공동체가 지향하였던 전쟁에 직면하게 되고, 대동아의 지역과 관련된 상징연속을 확대한 결과 등장한 것이 팔괘일우(八紘一宇)였다. 팽창이 역풍을 초래하는 역사적 과정은 도처에서 반복된다. 그 경험이 상상공동체로서의 지역과 관련된 현실적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백악관이 그리는 상상공동체와 북경이 그리는 그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팽창의 파괴적 역사는 언제든 반복할 수 있다.

지역연구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정치와 세계경영이 각축하는 현실세계의 즉자적 이해의 수단으로써 지역연구의 측면

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로컬에 기반한 연구안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소위 ‘소수민족’의 고향이자 중층식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곳들이다. 러시아의 아무르 하류(에벤키, 오로촌, 아이누 등), 아랄해의 카라칼팍,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중국의 티벳과 위구르 등, 적지 않은 지역들은 종족말살(ethnocide)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종족말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종족말살에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들의 공통적인 진행형의 문제는 주민들의 문화주권과 종족정체성의 문제들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소수민족’이란 용어에 내재된 문화정치학은 근본적으로 다수라는 존재의 횡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수? 얼마나 소수라야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팽창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이다. 애매한 ‘소수’에 근거한 중국의 민족학은 민족정책을 대변하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목하 진행형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하인리히 뵐이 ‘아담’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떳떳하게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다.

좌충우돌하는 소수민족정책을 두둔하는 중국의 민족학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학문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법론상 철저하게 내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화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학문이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의 ‘소수민족’학일 뿐이다. ‘문화인류학=민족학’이란 구도가 만연되어 있는 한 중국에는 제대로 된 문화인류학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대중화사상+민족학’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수민족화하고자 하는 것이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적 경험이 그러하고, 현재 진행형의 국제관계가 또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중국 지식인들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아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수민족화하려는 중국의 팽창은 반드시 역풍을 불고 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학, 즉 소수민족학, 그것은 정책학, 즉 정책을 위한 ‘學’(사실상 그것은 術이다)일 뿐이지, 보편성을 지향하는 학문이 될 수는 없다.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학문은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책을 위한 임기응변의 술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고 술수일 뿐이다.



정치경제 중심의 외관적 관점이 사회문화 중심의 내관적 관점으로 이동되는 것이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이다. 전자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시대에 맞추어서 지역연구를 하려면, 사회문화적인 부문에 무게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하고, 사회문화적인 부문의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궁극적으로 내관적인 방법의 동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들이 이미 과거에 다 해왔던 작업과정이기도 하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지역연구의 실질적 과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 차원보다는 단위가 작아야 한다. 멕시코와 라틴권을 연구하려면, 그곳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바리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연구를 실천하려면, 최소한도 마츠리와 신사를 단위로 하는 지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얘기다.

사회문화적인 부문의 지역연구에 동원되었던 조직의 대표주자로는 박물관이란 것이 있다. 냉전시대의 유산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의 기초 차원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이해하는 장(場)으로써의 박물관을 생각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더 이상 과거의 보물들을 수장하는 창고로써의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의 수집기능과 시청각교육 중심의 지역정보를 담아내는 곳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구와 박물관이 결합함으로써 지역연구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교육용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박물관이 지역연구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 V. 결어: 지역=학교

요즈음 진행되는 근대화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식민지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였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논의가 근대화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논박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후발효과가 겨냥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민족문제에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엇갈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는 민족이라는 현상과 근대화라는 구도의 결합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글로벌리즘이라는 상황 속에서 각축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는 논의의 정도가 지나침이 생산하는 과도한 국수주의의 발로로 이어지는 공포의 문제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다는 허기감이 제공하는 공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논의의 불공평성이 제공하는 논리적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공포감의 양극화가 빚어냄으로써 나타나는 썰물현상으로 인한 중간자의 논리적 공동화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역연구라는 주제를 다루는 본고에서 후자가 보여주는 논리적 공동화 현상의 반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논리라는 것은 논리 자체가 구성하는 시계열이라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연쇄 작동 기반을 고려한다면, 복잡한 신경조직으로 구성된 뇌구조에서 비롯되는 논리비약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논리적 공동화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논리비약을 유발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박정희 정권시대를 풍미하였던 근대화와 근대화 논의에 대한 검토와 반성 없이 이 땅에서 근대화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 공동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한 근대화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리적 공동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 논의에 대한 점검과 재점검이 필요하다. 당시의 논의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 논고를 벗어난 문제이다. 그러나 근대화 논의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본고가 겨냥하고 있는 지역연구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연구의 연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돈이 걸린 경마장에서 질주하는 마부의 눈망을 속에서도, 아수라장의 격투장으로 전환한 국회의사당에서도, 그리고 생사가 엇갈리는 아프간의 전장에서도 진행형으로 존재하는 나와 너의 인식에 대한 불평등성의 고발이, 목어와 어우러진 금강경과 바티칸 성당의 찬송가와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에 대한 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연구에는 그 출발점에서 관점의 문제(김경동, 2011: 37-57)가 개입되어 있다. 유럽 사람들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조형된 외관도 작동하고, 오리엔탈리즘에 의한 낙인과는 관계없는 내부 눈으로 보는 내

관도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정학적 맥락상의 문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외관적 지역과 내관적 지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역이란 어차피 내관과 외관이 각축하는 상상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경계가 단단한 지역으로부터 무경계의 지역까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이라고 설정된 지리적 공간 내의 주민 정체성과 문화주권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나는 지역이라고 부른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지역연구는 냉전적 쇠국성에 기초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공생적 개방성을 지향하는 지역연구의 개진에 대한 희망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첫 번째의 조건으로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사회문화의 영역이며, 공생적 개방성을 전제로 한 지역연구는 상대방의 문화주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방법론상의 선결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국을 한 덩어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소수민족’ 단위라는 점에 착안한 세밀하고도 밀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세계를 겨냥하는 지역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공생적 개방성을 지향하는 지역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해서 정당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인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사와 연구의 권위성에 대한 자성이 지역연구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사’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용어가 안겨주는 권력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조사’라는 것은 식민지적 상황에서 횡행하였던 관주도의 자료수집 방식이었다. 인구조사에 대응하는 사람은 부역과 병역에 대한 짐을 지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사람은 탈세의 혐의를 받고 속내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무슨 내용을 구성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권위적인 ‘조사’에 대해서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다. 특히 식민지 경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불편한 것이 조사에 임하는 입장이다.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식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사람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조사’는 경찰서나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모르면서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사’라는 과정은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저 집에 복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사람이 사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구조사이다. 저 회사가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탈세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세무조사이다.

연변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문헌조사를 통하여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구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문헌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설문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조사’ 대상에 대한 배려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사람이 관련된 ‘조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리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변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구비한 연구자는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조사(survey)가 아니라 학습(learning)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연구라는 과정은 문헌조사의 과정도 포함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역으로부터의 학습 기회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이란 학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지역=학교’라는 인식구도가 필요하다. 지역은 ‘수상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더 이상 ‘미개’한 곳도 아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공손한 자세로 배우기를 희망하면 되는 곳이다. 분석적 시각으로 지역의 모습을 재단(裁斷)하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역이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를 천우신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지역에 임하는 사람은 주민을 학교의 교사로 모셔야 한다. 주민은 더 이상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다. 주민은 총체적인 삶의 경영자이다. 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주민이 제공하는 지혜를 대하는 기회가 된다.

지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혜 학습의 기회가 지역연구다. 분석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지역연구라고 생각

한다. 뒤르카임이 제시하였던 ‘사실’로 돌아가는 것이 지역연구라는 주제의 학문성을 구현하는 방안이다. 그 사실에 충실하면, 오점의 지역연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을 왜곡하는 의도에서부터 지역연구의 방향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내관이 외관에 우선됨을 새삼 느끼게 되고, 지역연구의 방법론은 그 ‘누구’의 내관이 외관의 전제가 됨을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의 내관이 지역연구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투고일: 2012년 3월 22일 | 심사일: 2012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2일

## 참고문헌

김경동. 2011. “아시아란 무엇인가?” 『아시아리뷰』 1권 1호, 37-57.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Hall, Robert. 1947.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Pamphlet No. 3)*.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Abstract**

## Dependant Area Studies and Emic Perspectives

Kyung-soo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

We have been living a life deeply influenced by the so-called ‘postmodern’ culture transported from the West. Its influence has also impacted the academia of area studies. Yet, from whose perspective did it all begin with, and for whom? This paper starts from this question of mine. Indeed, area studies as a field of study was founded and 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era, during which imperialists had turned it into a field of their own benefit on the basis of their own needs. Since then,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narratives in area studies, even in Korea, be narrated from the North American or European perspectives without problematizing whose perspective it should be written from. This has become a kind of ‘perspectival colonialism’ that which continues to be practiced today.

Area studies, however, should go back to asking the question, “For whom are we doing area studies?” which is the question of perspectiv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an emic perspective, with focus moving from the politico-economic phenomenon to the socio-cultural. An area is considered to be an imagined community, where the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the etic and the emic, both come into play. Furthermore, the concept of area should be considered in a more positive light, as a ‘product’ of the identity and the cultural sovereignty of people. The old idea of an area as a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as it was

during the past days of imperialism, should now be changed to one of commensalism for the residents of the area. Speaking of methodology for future area studies, I suggest cultural sovereignty, which itself has built into an dominant area of research on its own. Thinking back on the concept of Emile Durkheim's "social fact," I suggest that we focus on gaining wise ideas of truth rather than analytical facts.

**Keywords** | perspective colonialism, emic, etic, commensalism, area=school.

